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단계적 일상 회복의 과정에서 오피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종까지 생겨 연말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 같다. 풀리는 것 같았을 때 해여행도 다시 빗장이 잡히는 등 여러 시그널들이 심상치 않다. 비대면 교육이나 행사로 진행했던 도시재생사업도 최근 축제나 전시회, 교육 등 대면 형식으로 바뀌면서 활력을 찾아가 싶었으나 다시 움추러 드는 모양새다. 시민들 개개인이 방역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얼마 전 광주도시재생 공동체센터에서 개최한 네트워킹 간담회를 다녀왔다. 기초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시작 단계에서의 계획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에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석박사급의 활동가나 연구진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코디네이터 활동가 등으로 불리는 도시재생사업 관리자의 중요성과 이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생각했던 것이다.

현재는 시작 당시 계획보다 더 많은 활동가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높아져 인적 역량 강

도시재생사업의 현안과 미래

화는 성공적이라 표현을 써도 될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투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 방향 설정과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 동구청이 광주도시공사와 빈집·점포 및 지하상가를 활용한 원도심 도시재생 업무 협약을 맺었다.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도시공사와 함께 그동안 방치되었던 빈집 및 지하상가를 활용해 동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광주시는 또 동구의 동계전 복원사업 기본계획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새로운 도시재생 아이템을 찾고 광주시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실행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식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도시를 놓고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행착오 중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먼저 완료된 기존 사업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생사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은 변화를 못 느끼겠다고 불평한다면,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 '저무는 도시재생, 또는 신속 통합 기획'이란 제목의 기사가 났다. 기존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 거주지역에서도 그간 사업 효과가 크지 않았고, 주민들의 주

거 개선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들어 도시재생 폐기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우리 지역이 아닌,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철차 단축을 지원해 속도를 내는 사업이다. 기사는 "그간 묶인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에 기대를 받았던 도시재생사업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자 신속통합기획 공모가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지역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거지 재생사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과거 광주에서 아트폴리스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흥행에 성공한 일본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를 광주에 도입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였다. 아쉽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도시재생에 이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로 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미적인 요소와 활용성·경제성 등과 같은 내용을 평가해서 광주 도시재생 아트폴리스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디자인이나 활용도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까? 또한 이를 활용해 광주 어번폴리와 연계를 통해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 내고 관광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획득하는 힘이 될 것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잠깐 길을 잃었는지 호기심 때문인지, 교실로 벌이 들어왔다. 깜짝 놀란 아이들은 고향을 치며 화생방 훈련이라도 하듯 머리를 감싸고 달아나거나 책상 밑으로 숨느라 호들갑을 떠다. 그러다가 벌이 나가고 나방이나 나비 따위가 들어오면 이번엔 자기가 잡겠다고 빗자루나 공책을 들고 야단법석 설친다. 아주 가끔 잡새나 까치가 들어오면 옆 교실 친구들까지 가세해서 복도까지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때마침 과제를 못 했거나 무료했던 차에 일이 생겼으니 호기심은 오히려 녀석들이 더 작동하였고 신까지 난 셈이다. 어쩌면 녀석들보다 새나 벌레들이 더 놀랐을 것이다. 이런 일을 몇 차례 겪은 녀석들은 벌레나 곤충이 들어오면 아예 입구부터 차단하고 신나게 놀아난다.

녀석들 시선이 벌레를 쫓는 사이, 난 슬며시 반대쪽 창문을 열어 놓고 어서 달아나라고 응원한다. 벌레를 가지고 노는 일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녀석들 손에 잡혀 온전히 살아 나간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불편한 심기가 앞선 탓이다.

간혹 독재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 가는 고단한 행렬이 아리게 떠오른다. 독재자들은 종족이나 문화,

나무칼과 오합혜(五合鞋)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을 혐오하고 도륙한다. 벌레를 벌레로 보지 못하고 무섭거나 징그럽게 여기는 어린이처럼, 공존할 방법이 많은데도 굳이 차이점을 내세워 증오하고 배척부터 한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백성들도 벌레처럼 이리저리 쫓겨 다니며 살았다. 말이 피난이지 쫓기고 또 쫓겨 산 속으로 해외로 애먼글면 삶을 도모해야 했던 아픈 역사다. 오랑캐와 왜구들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수많은 백성이 도망치다 귀가 잘리고 목이 떨어지는 등 참혹하게 희생을 당했다. 해방 후에는 이념을 앞세워 우리끼리 총구를 내밀고 동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념은 바로 상대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 행위를 통해 우리를 숙인다니, 대저 이념이 무엇인가에 죄없이 죽은 무덤 앞에서 이토록 뼈에 저리도록 아픈가. 대부분 이념은 자기에겐은 좋은 색깔을, 상대에게는 벌레 같은 색깔을 덧칠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조금만 열면 우주를 품고도 남을 마음이지만 그것을 좁히면 바람 한 점 들어갈 구멍이 없게 만드는 것이 이념이 아니던가.

4·3과 여순이 그랬고 80년 광주가 그랬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갖은 색깔을 씌워 벌레나 곤충처럼 무지막지하게 학살했다.

그럴 때마다 상부상조하고 여민동락했던 옛 조상들의 빛난 지혜가 그리워진다. 나보다 먼저 너를 앞세우고 늘 함께 하는 자세, 인간을 넘어 동물은 물론 벌레까지 존중하는 정신 말이다.

장자는 호접지몽이나 남곽자기 이야기를 통해 자아

와 외물은 본디 하나라고 역설하곤 했다. 우리가 편견 없는 시각으로 대상을 보면 그 대상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하고, 나로 인해 그 대상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몽골의 타이가 지대에 사는 차마족은 순록을 말처럼 애지중지한다. 순록이 늙어 숨이 다할 때는 쇠붙이가 아닌 나무칼로 급소를 찢러 고통을 줄여 준다. 우리 어머니들도 뜨거운 물은 곧바로 버리지 않고 충분히 식었을 때 수채통에 버렸다. 개미나 지렁이 미생물뿐 아니라 식물의 뿌리까지 상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옛 선비들은 먼 길을 떠날 때면 짚신을 한 보따리씩 싸서 다녔다. 짚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촘촘하게 삼은 십합혜(十合鞋)는 오래가고 실용적이지만 산길에 접어들면 벌레들을 위해 씨줄 다섯 가닥만으로 험겍게 삼은 오합혜(五合鞋)를 신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땅속 미생물까지 헤아릴 줄 알았던 선조들의 마음의 눈,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던 마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특히 근자에 더욱 되새김질해야 할 고귀한 가치다.

한바탕의 소란도 끝났다. 운이 좋게 벌은 내가 열어 놓은 창문으로 무사히 탈출했다. 녀석들은 누가 문을 열어 놓았느냐며 탄성을 지른다.

벌레나 곤충도 존재 이유가 있다. 그를 알려거든 그 사람 신발을 신고 1주일만 걸어 다녀 보아야 한다는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본다. 나무칼과 오합혜, 우리 조상들이 상대를 배려하고 낮은 자세로 길을 걷고 겸손하게 살고자 했던 모습, 그 정신이 깊이 가슴을 울린다.

社說

쌀 초과 생산량 '시장 격리' 즉각 시행하라

6년 만의 풍년으로 올해 전남 지역의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10만1838t(14.8%) 증가한 78만9650t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쌀 생산량은 388만160t으로, 지난해에 비해 10.7%(37만5022t) 증가했다. 이에 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측한 2021년산 신곡 수요량은 358만~361만t이다. 수요량과 비교하면 7~8%(27만2000~30만2000t) 초과 생산된 것이다.

풍년이 들었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쌀값 하락 우려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다. 실제로 20kg 기준 산지 쌀값은 신곡 첫 조사일인 10월5일 5만6803원 이후 11월25일엔 5만2998원(80kg 환산 때 21만1992원)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쌀값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정부는 뒷집만 지고 있다.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간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초과 생산된 쌀의 조속한 시장 격리를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하지만 정부는 산지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며 시장 격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급기가 농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엇그레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 나락 48t을 야적한 뒤 "쌀은 물가를 잡는 도구가 아니다"며 시장 격리를 촉구했다. 전국 140개 농협 조합장은 오늘 청와대앞에서 '쌀 시장 격리 촉구 총 쟁기대회'를 연다.

정부는 쌀 괴임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관리법에 초과 생산량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해 마련했다. 이제 법 적용을 위한 요건도 갖춰졌다. 그런 만큼 정책 결정에 틈을 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경찰인지 사건브로커인지' 악습 타파해야

동료나 지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했던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었던 위법 행위와 구태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엇그레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는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와 전직 경찰 B씨가 피고인석에 섰다. 2008년 퇴직한 B씨는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역으로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후배인 A경위에 게 청탁해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흘려 주고, 자신이 수사했던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는가 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시기를 수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전 변호사 사무장 C씨도 평소 친분

이 있던 A경위에게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경찰관에 대한 이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경찰인지 사건 브로커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청탁 수사나 수사 정보 유출, 사건 알선 등이 공개 재판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 등에게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고 20%의 수수료를 받는 게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사 정보 유출 등의 비위는 비록 일부의 일탈일지라도 해당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다. 나아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키우게 한다. 따라서 경찰은 구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전면적 수사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통령 선거 때면 되면 하늘에 새가 날아다녔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과거 민주주의가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던 시절,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세간에 떠돌던 풍문 중 하나다. 여기 나오는 새는 진짜 하늘을 나는 '새'(鳥)가 아니라 돈을 세는 단위 중 하나인 '조'(兆)다. 과거의 한 때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조 원에 이르렀다는 '말거나 말거나' 식 소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지금이야 정치자금법이 워낙 엄한 데다 시민들의 준법의식도 높아지면서 '돈을 주고 표를 산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지만, 어느 정도는

포폴리즘

현실을 반영한 '지라시' 정도로 받아들여져 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모 대기업이 백억 원대의 현금을 실은 트럭을 통째로 모 정당에 전달했던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이 있었으니 말이다. 1997년 대선당시 국제청을 동원해 대기업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달한 '세풍'(稅風)이나 안기부를 통해 불법자금을 모은 '안풍'(安風)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먼 과거 일 같지만 아직까지도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 선거를 3개월 남게 두고 여야가 역대 최고 수준의 '현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때문일 터이다.

여야 대선후보는 최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50조~100조 원대의 '손실보상금 지원'을 앞다퉈 제안하고 있다. 물론 이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50~100조 원은 '검은 비자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는 돈이다.

하지만 아무리 대의명분이 있고 또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지급처별 여야가 정치적 공방만 계속한다면 '선거를 의식한 포폴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의심과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지금 당장, 50조는 100조는 여야 합의로 지원을 확정 짓는 것은 어떨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라는 진정성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기고

'쌀 시장 격리' 국민 청원에 나타난 농심(農心)

유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쌀 공급형 직불제도를 도입하면서 변동 직불제를 폐지했다.

변동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쌀값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농업인들은 쌀값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당시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 보완적으로 시장 격리제를 제시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재해 등으로 쌀 생산량이 적어 요건에 도달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발동 요건이 갖춰졌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올해는 쌀 시장 격리가 가능하다. 발동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올해 쌀 시장 격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향후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쌀은 태국처럼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명실상부한 주식이다. 쌀을 생산하는 주체는 거대한 자본가도 대기업도 아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기도 하다.

해외에 의존하던 요소수 등 원자재 대란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는 식량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과 식량 자급률은 2019년 기준 각각 21.0% 45.8%이다. 만일 원자재 대란과 같이 수입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장 식량 대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으며 국가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의 양곡 보유량은 14만t으로 금년 공공 비축 35만t을 합쳐도 49만t에 지나지 않

는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보유 권장량인 70~80만t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3개월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이다.

정부는 식량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쌀 시장 격리를 즉시 단행해야 한다. 2017년 쌀값은 kg당 1570원선까지 떨어졌다가 정부가 시장 격리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2750원선까지 상승하는 정책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쌀값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됨을 알게 되었다. 농업인들은 쌀 생산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한계 쌀값은 최소 kg당 3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데 쌀값은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2600원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쌀값으로 지불한 돈은 얼마나 될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7.7kg이라고 한다. 일 단위로 나누면 158g, 또 하루 세 끼로 나누어 보면 한 끼에 52.7g을 먹는 셈이다. 이를 최근 쌀값(20kg 5만 2998원)으로 환산하면 1396원이 나온다. 하루를 합산하더라도 4188원에 불과하다. 또한 쌀 1kg이면 19명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쌀값이 비싸다고 한다.

전남을 농도라고 한다. 특히 쌀은 79만t을 생산하여 전국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은 쌀 주산지이며 전국 1위 생산지이다. 전남도민이 바로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조기영 농협 전남지역본부 양곡사업과장

지난 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양곡관리법에 근거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매입(시장 격리)의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수확의 기쁨을 즐겨야 할 시기에 왜 농업인들은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냈을까? 그 이유는 청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21년산 쌀이 예상보다 7~8%(약 31만t) 상당 초과 생산되어 남아도는 쌀 때문에 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 관리법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에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쌀 매입 발동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아직 쌀 매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쌀값 책정은 10~12월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시기에 쌀값 안정은 농업인들의 실질소득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올해 정부가 시장 격리 등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쌀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쌀 시장 격리제를 도입하게 된 데는 아주 특별한 이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